

김원이·권향엽 등 발의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탄소중립 전환 지원 ‘사기조작범죄수익몰수법’·국민연금법 통과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권향엽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K-스틸법’을 재석 256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사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한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도 K-스틸법에 시책으로 포함됐다.

철강 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생산·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력 산업이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보호무역주의 대두

와 탄소중립 전환 요구,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의 수요마저 급감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업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재석 256명 중 찬성 252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범죄단제가 저지른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그 규모를 산정할 때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56명 중 찬성 25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면 노령연금이 감액되는데, 개정안은 저소득 취업 노인의 연금 삭감을 막기 위해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소득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이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이전을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필수 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 단계별로 위기 대응 지침을 작성·운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 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과연 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과경연장 동의안도 각각 여야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수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亞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연장 논의 본격화

오늘 광주 국회의원 8명 주치 토론회

민형배 “보수정권때마다 사업 흔들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분권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대표 국가 프로젝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업 추진은 여러 차례 난관을 겪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광주 미래전략 핵심 사업들이 잇따라 패싱되고 있

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국비보조금은 2023년 513억원, 2024년 220억원, 2025년 172억원으로 급감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3분의1 수준으로 축소됐다.

현재까지 보조사업 국비 투입률도 30%에 그쳐 향후 3년간 필요한 국비 1조원 투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후퇴하고 있는 조성 사업의 정상화를 서두르고 사업 법정기간 종료(2028년)를 앞둔 상황에서 아특법 연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류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미래와 아특법 연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광욱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원,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 정경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아특법 연장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민형배 의원은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조성 사업이 흔들린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광주 홀대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2028년 사업 유효기간 종료를 앞둔 지금 아특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민형배·박군택·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과 광주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공동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金지사 “4조6천억 메가프로젝트 본격 추진”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도 촉구

김영록 전남지사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면서 “4조6천억원 규모의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철강 특별법 통과는 전남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철강산업이 위기를 딛고 재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철강산업의 경쟁

력 회복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관련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김 지사는 “전기요금 문제는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의 핵심 과제인 만큼 향후 보완 입법과 정책 개선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철강산업과 함께 전남 주력산업의 한 축을 이루는 석유화학산업 역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김재정 기자

정진욱 “백금열 교사 항소심 무죄 환영”

정가 프리즘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27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정치 풍자를 한 혐의로 1심서 국가공무원법상 유죄 선고를 받았던 ‘소리꾼 교사’ 백금열씨에 대해 항소심(광주지법 제4형사부)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항소심이 공무원 개개인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정치적 목적’의 범위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적확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체는 표결에 불참했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개로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진수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원호
220603-중-139779